

월요광장

메르스, 삼성의 길인가 공공의료의 길인가?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메르스가 한 달째 기승을 부립니다. 169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25명이 죽었습니다. 35번째 환자인 삼성병원 의사는 삼성병원이 아니라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을까? 삼성병원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네?”

민기 어렵겠지만 삼성병원엔 정식 음압병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압병실이란 공기가 항상 외부에서 내부로 흐르도록 해서 병실 안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병실입니다. 사스, 에볼라, 메르스 치료에 꼭 필요한 병실이지요.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삼성병원 의사를 서울대병원으로 보낸 건 음압병실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긴급대응팀의 전문가도 “국내 최

대 병원으로 손꼽히는 삼성서울병원이 음압 병실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고 병원으로 꼽히는 삼성병원은 왜 이럴까요? 음압병실 1개를 만드는 데 시설비가 3억5000만 원, 공조기 등 장비 비용이 8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상당한 비용, 공간, 인력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수익성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보다 돈’이라 그런지, 삼성병원에선 돈 안 되는 음압병실을 만들 이유가 없었겠지요. 보건으로 노조에 따르면 “삼성병원은 보험수가가 낮은 응급실에 투자를 하지 않아 음압병실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삼성병원은 병원장도 감염내과 출신인 데다 감염내과 인력과 장비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메르스 전국 확산의 진원지가 된 ‘비밀’은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은 X파일 사건, 반도체 백혈병 사건,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등 우리 기억에 생생한 사건에서 범 위의 존재로 군림해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메르스 사태에서도 삼성병원은 “삼성병원이 틀린 것이 아니라 국가가 틀린 것”이라고 강변하며 우리나라 방역체계 밖에 존재하는 성역에서 자 ‘치외법권’ 지대를 자임했습니다. 삼성

병원은 국민적 공분이 견잡을 수 없게 되고서야 겨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해결책이란 게 엉뚱하게도 “삼성병원 외래에서 치료받던 환자에 한해 주치의에게 전화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격진료는 이건의 회장이 돈 벌이가 될 사업이라고 눈독을 들여온 ‘신사업’인데 현행 의료법에 가로 막혀 있었지요.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국민적 공분의 한 가운데서 삼성은 엉뚱하게도 원격 진료 허용이라는 속된 사업을 해결한 셈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불안을 부채질하여 도리어 이윤 추구의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마술’을 보는 듯합니다.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공공의료의 약화 메르스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바로 그 지점에서 도덕적 위기를 오히려 돈벌이 기회로 만든 셈입니다. 삼성은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화보험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원격진료 시스템은 질병정보 db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분야에 해당됩니다. ‘음압병실 제로’의 삼성병원이 국민에게 가했던 고통은 앞으로 더 큰 재앙으로 돌아 올 것만 같습니다.

이번 메르스가 확산된 첫 번째 이유는

공공 병원의 부족입니다. 공공 병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73%이고, 의료 민영화의 해악이 심각하다는 미국도 30% 정도입니다. 한국은 6%에 불과합니다. 메르스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 병실은 2003년 사스 사태 이후만 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국립대학 병원이나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강릉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전국에 105개 있는데, 우리 지역엔 전남대 병원에 5개, 국립목포병원에 10개가 있습니다.

음압병실과 음압병동까지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평소에는 환자가 없어서 ‘비효율적’인 게 사실입니다. 유지비용은 들어가지만 수익은 없다는 얘기지요. 불날 때를 대비해서 소방서를 두면, 평소 돈은 안 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바로 음압병실이고, 그 역할은 공공병원이 해야 하는 거지요.

광주는 아직까지 메르스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다. ‘음압병실 제로’의 삼성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의료 공공성 강화의 길로 갈지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대전이나 성남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듯이 ‘광주광역시 의료원’ 설립은 그 시급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조칼럼

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



송명섭 광주지검 검사

검사는 형사 범행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 즉 피의자를 수사하여 그 죄가 인정되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하거나 일정 액수의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약식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를 통해 법원 정식재판에 회부된 피의자는 그 지위가 피고인으로 전환되어 법원의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 유죄로 인정되면 재판부가 정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형을 선고

받은 후 상소 등을 거쳐 그 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여 일정 액수의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 재판부를 상대로 벌금형의 감액을 희망하면서, 여러 사정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나눠서 납부하거나 지정된 기한보다 늦춰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 액수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법원의 재판에 속하나, 벌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연기’는 검찰의 집행사무 영역 내 업무로서 법원 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

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의무를 지게 된 납부의무자들을 위하여 검찰에서는 법무부령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통해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 제1항)을 보면,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 자격을 보면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보호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 (3호) 장애인, (4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 람이 없는 사람, (5호)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호)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그 납부의무자, (7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8호) 실업급여 수급자, (9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위와 같은 신청 자격이 있는 납부의무자의 벌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받게 되면, 검찰 집행사무 담당직원의 조사 등을 통해 분할납부 등의 필요성 등을 심사한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 자격 중 (1호)부터 (8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도 여러 사정 등으로 인해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검찰에서는 위 신청 자격 중 ‘(9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 도 내에서 납부의무자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는 방향으로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는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고

때 이른 불별더위 속 어르신들의 빈곤 전쟁



선은애 송원대 국방공무원학과 교수·법학박사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은 6월 입에도 연일 삼서 30도를 넘는 날씨로 인하여 벌써 불별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때 이른 무더위 속에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시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5년 후인 2030년에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1269만 명에 달해 전체인구의 24.3%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처럼 빠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

지 않다.

광주·전남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은 광주가 10.83%로 10%대를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전남은 20.14%로 처음으로 20% 대를 돌파했다. 이와 같이 이 지역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세 가지 고통(三苦), 즉 빈곤, 질병, 고독의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인구의 빈곤율이 1 위인 것과 동시에 상대적 빈곤율도 49.6%로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 인구의 빈곤은 정년 이후의 생활에 대한 노후준비가 부족하였고, 이 계층을 위한 일자리 수의 절대적인 부족, 적은 공적연금액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예전 대가족시대에는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를 집에 모시며 부양하는 것을 기본 덕목으로 인식하고 생활해 왔으나, 핵가족화 시대 및 1인 가족 시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의 생활만을 중시한 채 부모의 부양을 하지 않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어르신들도 직접 정년 후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도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1만7281원인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연금 만으로 생활을 하기에 실질적으로 버거운 수준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빈곤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출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빈곤·의료지원 등 고령화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다 쾌적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에 대한 노후생활과 은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노후

에 대한 생활을 인식하고 향후 노후생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빈곤을 예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적극적인 자세로,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정보의 습득이 쉽지 않은 분들은 박람회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기업에서도 직접 어르신들을 채용할 수 있고 이력서와 같은 서류작성에 익숙지 않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런 박람회를 통해 더욱 많은 채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분들을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급여를 받아 빈곤문제의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광주·전남은 불별더위 속에서 더위와의 싸움이 아닌, 빈곤 및 외로움과 전쟁을 하고 있는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社說

신임 법무 내정 호남 끌어안기 신호탄이길

신임 법무부 장관에 고흥 출신 김현웅 서울고검장(56·사법연수원 16기)이 내정됐다. 이명박 정부 이래 호남 출신으로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두 번째 인사다. 앞서 이귀남(64) 전 장관이 있었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대검차장·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에 영남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안배 인사의 성격이 짙다 하겠다.

김 내정자는 광주 제1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26회에 합격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춘천지검장, 서울 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거쳤다. 2013년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5개월간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 총리와 함께 일하기도 했다.

김 고검장의 부친은 판사 출신인 김수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1979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보성·고흥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끌던 공화당에 입당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런 간접적인 인연은 김 고검장이 호남 출신임에도 여론에서 비교적 부담 없는 인물로 받아들인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김 내정자는 집적하고 부드러운 성품에다 깔끔한 일처리로 조지 내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도 나온다. 장관감으로 손색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아무래도 앞서 언급한 대로 호남 출신 인사가 선임된 점이라 하겠다. 그동안 현 정부는 국민통합을 출근 부로 찾으면서도 지난번 총리 선임의 예에서 보듯이 번번이 국민통합과는 먼 인사를 해 왔다.

물론 장관 한 명 더 호남 출신을 임명한다 해서 하루아침에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사가 박근혜 정부의 ‘호남 끌어안기’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 메르스본부 역학 전문의 한 명 없더니

메르스 확산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안심할 일은 아닌 듯하다. 지난 20일엔 전주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지 9일 만에 다시 양성으로 돌아선 60대가 사망하기도 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당장 메르스 청정지역이지만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개막을 목전에 앞둔 광주시로서는 더욱 그렇다.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대회 기간 동안에도 메르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철통방역이 최우선 과제라 하겠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일말의 불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광주시는 메르스 관련 질병 치료 위주의 방역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해 환자 추적과 감염 차단 중심의 역학시스템 구축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달리 말해 환자 추적과 감염 차단 중심의 역학시스템 구축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광주시 민관합동본부에는 치료

문가는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환자 추적 및 전염병 차단의 필수 인력인 역학(예방의학)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메르스의 확산 특성상 단 한 명의 수퍼전파자라도 그 감염 능력이 가히 가공할 만하다 할 수 있다. 광주가 메르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역학 전문의는 메르스 등 전염병과 관련한 격리나 해제 및 범위 설정, 방역, 차단, 환자 경우시 역학조사 등 전염병 전반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전염병 발생 시 필수 방어 인력으로 꼽힌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 메르스 합동본부에 역학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역 전문가들의 조언은 매우 타당하다.

시간을 다투는 일인 만큼 광주시는 대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한다. 차일피일 미루다 U대회 메르스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조선을 개국한 태종은 함흥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기 위해 대궐 밖 문루에 신문고를 매달았다. 하지만 ‘누구나 북을 칠 수 있다’는 것은 말뿐이었고, 실제로 아무나 신문고를 치지는 못했다. 엄격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억울한 일이 생긴 백성은 고을 수령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고을 백성이 임금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면 자신

은 치도곤을 맞고 쫓겨나야 했다.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는 억울함은 역모 사건 고발이나 살인, 친자 확인, 정실인지 첩인지 구분하는 것, 양민인지 천민인지 구분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그 밖에는 자손이 조상을 제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그리고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할 수 있었다.

신문고를 주로 서울의 관리들만 이용

신문고

하고 일반 백성이나 노비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백성들은 불문가지다. 또 수령에게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이번에는 관찰사에게서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어렵사리 받아낸 두 장의 확인서를 들고 서울로 가면 또다시 사헌부에서 확인서를 받아 내야하는 난관이 기다렸다.

확인서를 모두 쟁겼더라도 의금부가 관리하는 신문고를 담당 올릴 수는 없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백성이 세 군데 관청에 중원을 넣었다는 것을 의금부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다. 한두 달을 기다려 신문고를 칠 자격을 얻었다 해도 아무 민원이나 넣었다가

하고 일반 백성이나 노비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백성들은 불문가지다. 또 수령에게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이번에는 관찰사에게서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어렵사리 받아낸 두 장의 확인서를 들고 서울로 가면 또다시 사헌부에서 확인서를 받아 내야하는 난관이 기다렸다.

확인서를 모두 쟁겼더라도 의금부가 관리하는 신문고를 담당 올릴 수는 없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백성이 세 군데 관청에 중원을 넣었다는 것을 의금부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다. 한두 달을 기다려 신문고를 칠 자격을 얻었다 해도 아무 민원이나 넣었다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